

변경대비표

2023.09.20

○ 펀드명 :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투자신탁1호(H)[주식-재간접형]

○ 정정사유 :

- 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
- 2) 법 개정사항 반영
- 3)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

○ 상세내역 :

[집합투자규약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제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)	법 개정사항 반영	①(생 략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(생 략)	①(현행과 같음)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,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,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, <u>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</u> ,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. ③(현행과 같음)
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	법 개정사항 반영	①(생 략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<u>초래하지 아니하고는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~5. (생 략) ③(생 략)	①(현행과 같음)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<u>초래하지 않으면</u>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1.~5. (현행과 같음) ③(현행과 같음)
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법 개정사항 반영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	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

		<p>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생 략)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~⑤(생 략)</p>	<p>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~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</u>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)이</u>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법 개정사항 반영	<p>①(생 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3.~5. (생 략)</p> <p>③~⑪(생 략)</p>	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3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~⑪(현행과 같음)</p>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<p>1)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</p> <p>2) 법 개정사항 반영</p> <p>3)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</p>	<p>[요약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 <p>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p> <p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운용전문인력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<별첨></p> 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		

	<p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</p>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</p> <p>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<p>1. 재무정보</p> 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</p> 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</p> <p>6.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</p> 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 <p>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. 수시공시</p>		
<p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※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①~⑤(생략)</p> <p>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※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①~⑤(생략)</p>	<p>※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①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[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]</p> <p>※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①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</p>	<p>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</p>	<p><신설></p>	<p>[증권대차 거래 위험]</p> <p>이 투자신탁은 초과수익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증권대차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로 시장상황에 따라 이러한 거래로 인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증권대차거래 이후,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시스템, 운영요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</p>

			등으로 인해 대차증권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미상환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증권대차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	주 5) 이 투자신탁(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)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[0.94%] (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)로 추정하며,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	주 5) 이 투자신탁(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)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[0.81%] (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)로 추정하며,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법 개정사항 반영	<div>4)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S-p 수익증권 가입자 :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div>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<tr><td>납입 요건</td><td>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td></tr><tr><td>세액 공제</td><td>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</td></tr></table>	구 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세액 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	<div>4) 종류C-p, 종류C-pe, 종류S-p 수익증권 가입자 :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</div> 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주요 내용</th></tr><tr><td>납입 요건</td><td>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 이라 한다)</td></tr><tr><td>세액 공제</td><td>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td></tr></table>	구 분	주요 내용	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 이라 한다)	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													
세액 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. 단,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 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														
구 분	주요 내용														
납입 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1. 연간 1,800만원 2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 이라 한다)														
세액 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단,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														

		<div>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</div> <div>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div>		
	<div>분리과세한도</div>	<div>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</div>	<div>연금소득 분리과세</div>	<div>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)</div>
	<div>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</div>	<div>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div>	<div>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경우</div>	<div>- 천재지변 -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 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-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허가 취소, 해산 결의, 파산선고</div>
	5) 종류C-p2, 종류C-P2e, 종류S-pr 수익증권 가입자 : 퇴직연금제도의 세제			5) 종류C-p2, 종류C-P2e, 종류S-pr 수익증권 가입자 : 퇴직연금제도의 세제
	<div>구분</div>	<div>주요 내용</div>	<div>구분</div>	<div>주요 내용</div>
	<div>세액공제</div>	<div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</div>	<div>세액공제</div>	<div>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</div>

		<p>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</p> <p>※ 퇴직연금종합안내(http://pension.fss.or.kr)의 “과세제도안내”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	<p>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.2%(또는 16.5% 지방소득세 포함) 세액 공제 단, 퇴직연금계좌 새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p> <p>※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(https://100lifeplan.fss.or.kr)의 ‘연금세제안내’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제4부.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. 채권평가회사 에 관한 사항 가. 회사의 개요	업데이트	KIS채권평가(주)	KIS자산평가(주)
제5부. 기타 투 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 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법 개정사항 반 영	<p>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~2) (생략)</p> <p>3)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.</p> <p>1)~2) (현행과 같음)</p> <p>3)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</p>

		<p>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5) (생 략)</p>	<p>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한 후 <u>1년</u>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5) (현행과 같음)</p>
<p>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수시공시</p>	<p>법 개정사항 반영</p>	<p>2) 수시공시</p> <p>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 게시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③~⑦ (생 략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⑩~⑪ (생 략)</p>	<p>2) 수시공시</p> <p>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)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·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, 집합투자업자·판매회사의 본·지점 및 영업소 게시,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)</p> <p>③~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<u>1년</u>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<u>1년</u>(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⑩~⑪ (현행과 같음)</p>

*** 별 첨**

주1) 증권의 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

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

주2) 증권의 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	[요약] - 투자비용 - 투자실적추이 - 운용전문인력		